

양자 가상대결 vs 4지 선다 '룰의 전쟁'

윤석열·홍준표 여론조사 문항 사생결단

“4지 선다, 본선 경쟁력 측정 왜곡”
 “양자대결, 변별력 나오지 않는다”
 당 선관위 오늘 조정안 확정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간 본격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양자가상 대결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4지 선다 방식을 요구하는 홍준표 의원 입장 사이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선관위가 룰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25일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4지 선다형은 이재명 지지자가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인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윤 전 총장 측의 양자대결 조사 주장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과의) 당대당의 지지율 (조사)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의) 변별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선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경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유 전 의원 측을 협상하는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정권교체 경쟁력을 묻는 4지 선다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이재명의 대선후보 적합성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 이름을 포함하는 조사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양자 가상대결은 응답자에게 네 번의 답변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라서 당원투표와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 캠프 총괄인 김용태 전 의원은 “가상 양자대결이 여론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판별하는 데 적합하고, 따라서 ‘경쟁력 조사’에 대한 주자와 선관위 간 기존 합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관위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을 사전질문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이 막판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론 지지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사실상의 ‘역선택’ 문항으로 봐도 무방하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정권교체 찬반 조항은 선관위 실무회의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낸 ‘기술적 제안’에 가까웠지만, 주자들끼리 각자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서 변수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주자들 간 경선을 갈등 상황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는데, 정당 정치나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주자들 간 경선을 갈등 상황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는데, 정당 정치나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논란 대상인 가상 양자대결이나 ‘역선택 방식’ 등에 대해 사실상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서 “유불리를 떠나 본선 경쟁력을 다루는 상식적인 선거 룰이 되어 하고, 논의가 끝난 역선택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오전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항목 및 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원희룡 부인 소시오패스 발언 집단 성토

“인신 공격이자 정치적 개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개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캠프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근거가 박약한 상태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느니 소시오패스라니 단정하는 것은 선부른 일이자 정치적 개입”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원 전 지사 부인이 이 후보를 한번 진찰해보기를 했느냐, 면담해보길 했느냐”며 “언론에 나온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서 정신병자라고 딱지 붙이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도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원 전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 전 지사와 해당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그는 TBS 라디오에서 “그분(원 전 지사의 부인)은 사실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다.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후보의 부인”이라며 “치료가 안 된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신공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으로 상대 당 대선후보 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하고 치졸한 행동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

거 막판에 이런 걸로 몇 표 얻으려고 하는데 불쌍함도 느껴진다”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최택용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원 전 지사는 방송 중에 패널이 자기 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성을 지르고 흥분하고 분노조절장애적 모습을 보였다”며 “과연 국민들이 원 전 지사는 정신적 문제가 없다고 느끼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특히 논란의 ‘개 사과’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 의원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 모르겠다”며 “몇 마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의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이어 “이것은 광주,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자 역사의 문제며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하는 행태들이 아주 가관”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흔쾌히 사과하던 분이 전두환 미화만큼은 사과하기 싫었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사진이 게시된 시간대를 거론하며 “새벽 12시-1시 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는 게 정치권 정설이다. 부인이 관련됐다고 의심할만하다”고 짚기도 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최진석 교수 만나 철학·과학·교육 국가 비전 제시

한빛원전 찾아 에너지 정책 비판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전남을 찾았다.

안 대표는 이날 함평에서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철학과 과학, 교육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이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70-80년대 이념에 화석화되어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 교수는 “이념은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수입하는 사람이 있다. 저 새 새 몸으로 이념의 수입자가 아니라 이념의 생산자가 되려고 한다”면서 “생산자는 황무지를 찾아서 경지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과학으로 대화 주제를 바꿔 “과학이라는 어젠다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정 과제로 만들어져 본 적이 없다”고 회두를 던졌다.

이에 안 대표는 “전 세계의 (과학) 패권전쟁이 시작됐고, 바이든이 웨이퍼(반도체 핵심 소재)를 들고 있는 사진이 뜻하는 의미가 과학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라면서 “시진핑도 칭화대 화공과 출신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과학기술인 중국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함평군 대동면 ‘호접몽가(胡蝶夢家)’를 방문해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공>

쏟아붓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과학적인 어젠다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교육 문제로 주제를 옮겨 “교육 개혁도 20년씩 걸리는 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작해야 하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을 보이고 있다.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게 교육 같다”고 뜻을 같이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영광원전을 방문해 “원자력발

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이상적인 발전 방식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 등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간헐성을 극복할 수 없고 필요한 토지도, 공간(발전소)도 많이 있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

송영길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심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에 대해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축소했는데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국회를 찾아오신 분이”라며 “다른 대통령들은 일정상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서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최다 방문해

주신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연설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출산율이나 노인빈곤율, 자살률 같은 사회상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부동산 문제를 인정하고 과제를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번 600조원의 예산을 통해 이런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충실히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 등에 피해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여야는 박수를 보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

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론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용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